

공청회 회의록

(14시 00분 개회)

● 운영지원단장

지금부터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전면에 있는 태극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 토론에 앞서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5차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간을 내어 지정토론을 맡아주신 지정토론자 여러분과 공청회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신 일반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공청회를 위해서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신 김봉수 이사장을 비롯한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양형절차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2007년 4월에 출범하였고, 올해로 출범 5년째가 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2009년에 살인, 뇌물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하였고, 2011년에 사기, 절도 등 8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시행해서 현재까지 형사사건의 약 43%를 차지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건 중 90%에 이르는 사건에 대해서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양형위원회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형사재판을 실현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저희가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 27.에 구성된 제3기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끌어내기 위해서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여서는 안 되고 양형기준제도를 더욱 확대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의 제도 역시 새롭게 정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데에 그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양형위원회는 작년 6월 증권·금융, 교통범죄 등 8개 범죄군에 관하여 새롭게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금년 1월에는 국민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던 성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양형기준이 일반인들의 건전한 상식에 더욱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저희 위원회가 새롭게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8개 범죄군 중 그 일부인 증권·금융범죄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로 일반 시민들의 공청회 참여를 촉진하고 양형기준 제정 과정에 시민들의 뜻을 더욱 철저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법원 내부에서 개최되던 기존의 공청회와는 달리 이곳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공청회에서 다룰 증권·금융범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해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교통범죄 역시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전체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고 발전적인 토론과 제안이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일반 시민의 뜻을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우리 양형위원회가 준비한 양형기준안에 대해 기탄없는 의견과 건전하고 유용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신년을 맞이해서 좋은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 때 건배사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건배사를 하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입니다. 원래 바라는 것보다 더욱더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원더풀’입니다. 여러분 모두 임진년 새해는 원더풀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운영지원단장

먼저, 양형기준안 발표가 있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자 및 토론자를 단상으로 모시기 전에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안

발표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동렬 부장판사님이 하시겠습니다. 최동렬 부장판사님은 단상 위에 설치된 연단으로 오셔서 증권·금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렬 판사입니다.

양형기준안을 발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이런 뜻 깊은 자리에서 저희 전문위원단을 대표하여 양형기준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은 법관, 검사, 변호사 그리고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3기 양형위원회 출범 이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및 제3기 양형기준안의 작성 실무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하여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군 양형기준 초안은 전문위원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에서 다각적인 검토·논의와 양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한 것입니다. 여기에 국민의 건전한 법 감정과 상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물론이고 추후 이어질 관계기관 의견수렴절차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주요내용을, 첫째 유형분류, 둘째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셋째 다수범죄 처리기준, 넷째 집행유예 기준의 순으로 소개한 다음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양형기준안 적용사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권범죄 중 불공정거래와 공시위반은 자본시장법이 규정하는 중요한 범죄로서 법정형도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구 공판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범죄는 주로 자본시장법위반 범죄를 대상으로 삼았고,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크게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와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 2가지로 대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 유형에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그리고 부정거래와 같은 행위유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 유형에는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불이행과 같은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범죄에는 특정

법상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주체 및 행위태양에 따라서 대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임직원에 대한 중재,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라는 3가지의 대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증권·금융범죄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범죄 중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첫째 시장에 참가하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심대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게 되고, 둘째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며, 셋째 그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염원하는 것이 국민적 여론이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사기범죄에 준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래 양형실무에 비하여 대폭 강화된 형량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범행수단이 불량한 경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여 가중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는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 그리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종전 양형실무에 비하여 규범적으로 형량을 상향조정한 결과 공무원 뇌물범죄와 같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수재와 관련된 부정한 업무처리나 적극적인 금품 요구가 있는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각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형량범위표 및 양형인자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도표가 증권범죄 중에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의 형량범위표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는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또는 회피 손실액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이득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권고 형량범위도 높게 설정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 금액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또는 사기범죄의 양형기준과 같습니다.

위 범죄들은 특경법상 횡령·배임 또는 사기범죄와 법정형이 같고, 횡령·배임이나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양형기준안이 설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횡령·배임범죄보다는 사기범죄의 형량범위가 다소 높게 설정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대체로 어느 범죄를 기준으로 형량범위를 설정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고, 그리고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고려하여 횡령·배임의 형량보다 높은 일반 사기범죄의 형량범위와 같게 설정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가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의 양형인자표입니다.

‘대상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양형기준에서 특별가중인자는 높은 권고 형량범위로 이동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의 구체적 사례로는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본으로 M&A를 하고, 그 과정에서 지출한 자본의 회수 또는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우’ 또는 ‘법인의 대주주 혹은 대표이사 등 내부자가 범행하거나 또는 이들과 공모해서 범행한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또는 ‘실제 주가에 미친 영향이나 행위의 규모가 작은 경우’ 등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증권범죄군 중에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는 자본시장법 및 외감법상의 공시의무위반범죄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정형의 고저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에 비해서 허위재무제표 작성과 같은 분식회계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를 다소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의 양형인자표입니다.

‘장기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범행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 가담경위 또는 범행 동기에 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증권범죄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범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범죄군 중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행에 대한 형량범위표입니다. 공무원의 뇌물수수범죄와 같게 수재액수를 기준으로 6개의 구간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수재액이 증가함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각 구간의

기준이 되는 금액 역시 뇌물죄의 양형기준과 같습니다. 특히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써 가중영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설정된 점, 이 역시 뇌물죄의 경우와 같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는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직무 불가매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로 인하여 일반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가 초래되는 현실을 고려해서 양형위원회에서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부패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인자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죄는 뇌물범죄와 비교해 볼 때 구성요건이나 법정형, 그리고 행위태양이 유사한 점을 고려해서 설정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 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그리고 ‘적극적 요구에 의한 범행’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극히 경미한 경우’ 또는 ‘요구 약속에 그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융범죄군 중에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그 대항범이라고 할 수 있는 증재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역시 뇌물공여범죄와 같게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양형인자표입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범죄에서는 ‘적극적 증재’ 그리고 ‘청탁내용이 불법이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와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증재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는 법정형이 같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선고형량 역시 유사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형량을 기준표와 같게 설정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범죄는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범죄의 양형인자표와 대동소이합니다.

이상으로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기준안은 기본적으로 동종 경합범과 이종 경합범을 구분해서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득액 또는 수재액과 같은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는 자본 시장 공정성 침해범죄 상호 간, 그리고 금융범죄 상호 간 동종 경합범의 경우에는 뇌물, 사기, 횡령·배임범죄와 마찬가지로 금액 합산 특칙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형법상 경합범의 경우에는 가장 중한 형의 장기의 1/2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형기준에서는 이득액 또는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합산결과 유형이 상승하는 경우에 그 하한의 비율을 일정비율 감경하도록 해서 법규정과의 틈을 좁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이종 경합범 처리기준입니다.

이종 경합범의 경우나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의 동종 경합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수범죄 가중방법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 상호 간 동종 경합범 또는 금융범죄 상호 간 동종 경합범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액 합산 특칙을 적용한 다음에 일반적 다수범죄 가중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보다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2개 이상 많이 존재할 때에는 실형이 권고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점은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 중에서 ‘시세조종행위로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실형권고사유로서 별도로 명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하여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주가조작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집행유예 참작사유입니다.

먼저,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입니다.

대체로 해당 범죄 양형인자표에 특별양형인자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입니다.

다음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입니다.

다음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 유형입니다.

다음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유형입니다.

대체로 금융범죄의 경우에는 뇌물 참작사유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몇 가지 적용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만 주를 이용하여 100여 회에 이르는 고가매수와 통정매매 주문을 반복한 사안입니다. 주가 상승분은 약 130%에 이르렀고, 부당이득 취득금액은 약 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종전 판결의 선고형은 징역 1년 6월에 3년간 집행유예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제3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르면 징역 3년~6년의 형량범위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서 종전보다 훨씬 엄중한 형량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범죄 양형기준안 적용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갑은 은행의 안전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피고인 을은 은행의 경비용역 업체 사장입니다. 은행과는 CCTV 렌탈계약 등을 수시로 체결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은행직원인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수된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이 범죄에 대해서 종전에 선고된 형량은 피고인 갑 징역 3년, 피고인 을 징역 10월이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양형기준안을 적용할 경우에는 피고인 갑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의 제3유형에 해당하고, '적극적 요구'라는 특별가중 인자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6년으로 종전보다 엄정한 양형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을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중재의 제2유형에 해당하고,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운영지원단장

이상으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발표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자 및 증권·금융범죄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사회자, 발표자 및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의 사회는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계신 임성근 고등법원 부장판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임성근 상임위원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뒤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수료하셨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조금 전 증권·금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발표해 주신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동렬 부장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렬 수석전문위원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으셨고,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바쁘신 업무 중에도 양형기준에 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증권·금융범죄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현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고창현 변호사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공학상품 자문위원 및 코스닥등록법인협의회 자문위원, 증권거래소 규율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및 한국증권법학회 이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김세형 주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형 주필님은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셨습니다. 현재 매일경제신문 주필 겸 논설실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면서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으로, 진웅섭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웅섭 국장님은 건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셨으며, 제2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위원회 대변인을 거쳐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토론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토론자를 위하여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마지막으로 지정토론에 답변자로 참여하실 정준화 판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준화 판사님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신 뒤 제32회 행정고등고시와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계시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시면서 증권·금융범죄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초안 준비작업에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일동박수)

이상으로 사회자 및 토론자 소개를 마치고 사회자인 임성근 상임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증권·금융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발표문과 토론문을 정성껏 준비해 주신 발표자와 세분의 토론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증권·금융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의 증권·금융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한국거래소에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경제의 중심지인 이곳에서 공청회를 개최함으로써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이와 같은 뜻깊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한국거래소 김봉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한국거래소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지정토론자 세분은 증권·금융분야의 전문가로서 증권·금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관해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신 최동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으로부터 증권·금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각 토론자께서는 10분 내외로 준비하신 지정토론문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정토론자 세 분의 지정토론문 발표가 끝나면 그 이후 발표자 또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토론과 답변이 끝나면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려서 자유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연구발표에 대해서 발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오늘 증권·금융범죄 이외에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도 함께 공청회가 열리게 된 점을 고려해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먼저 고창현 변호사님께서 지정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김세형 주필님, 진웅섭 국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창현 변호사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 고창현 변호사

방금 소개받은 고창현 변호사입니다.

우선 오늘 증권범죄와 금융범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금융범죄의 경우는 아까 발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뇌물적인 성격의 범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재액 또는 증재액을 원칙적인 양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에 의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 내부자거래 등 그와 같은 경우에 과연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원칙적인 양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든가 회피 손실액이 단순히 행위자의 위반행위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인 유가증권 종목이나 거래 당시의 시장상황, 다른 거래자의 행위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행위자도 행위 당시에 이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북한 경수로 폭발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이 서울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허위사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주가를 조작한 다음에 시세차익을 남긴 사안에서는 결과적으로 2,7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가조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시장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그런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결과적으로 얻은 이익이 얼마 안 된다, 즉 이 기준표에 따르면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가중을 해도 상한이 2년 6월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최근 10여 건의 사건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ELS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ELS 사건이 있는데 그 경우 과연 시세조종에 해당되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행위자들의 고의 또는 행위태양 등을 볼 때 단순히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다, 그러면 이 기준표를 보면 최저 감경을 해도 5년 이상인데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물론 자본시장법에 법정형이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고, 범죄행위로 얻은 시세차익의 많고 적음이 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이득액을 중요 양형인자들 중 하나로 보거나 또는 지금 양형기준안처럼 원칙적인 양형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등의 경우에는 행위태양이나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들을 고려해서 현재 양형기준안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가중이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권범죄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정성 침해범죄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를 단일한 기준을 적

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만, 미공개 중요정보와 시세조종의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같은 경우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미미하거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시세조종은 행위의 목적 자체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주가를 변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공정성이나 신뢰성, 효율성을 훨씬 더 많이 훼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비교적 범행수법이 단순합니다. 물론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하는 차명거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수법 자체가 불량한 경우는 별로 없죠. 거기에 비해서 시세조종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주문, 허위사실 유포 등 아주 다양하고 불량한 범행수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 생성된 호재나 악재 등에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일회성 내지 단기간에 증권거래에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비해서, 시세조종은 굉장히 치밀한 범행계획 수립 이후에 적극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정보를 장시간 창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보다는 시세조종의 경우에 작전세력을 형성해서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시세조종의 경우에는 1814년 영국군 해군제독인 알렉산더장군이 나폴레옹이 죽고 영국군이 승전했다고 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런던 증권거래소에서 영국 국채가격을 상승시켜서, 소위 말해 ‘먹튀’를 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처벌이 됐죠. 그게 벌써 1814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내부자거래 같은 경우는 증권법이 생긴 게 1943년, 1944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생겼는데 증권법이 생긴 이후에도 30~40년 동안 처벌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내부자거래가 처벌된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미국법상으로도 1980년도 Chiarella 판결이라든가, 1997년도에 나온 O'hagan 판결 등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2개가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공정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나누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 나눈 다음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행위자의 신분, 예컨대 이게 대상 회사의 최대주주나 임원이냐, 또는 대상 정보를 취급하는 소속부서 직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 내부자냐, 준내부자냐, 정보수령자냐, 차명거래를 이용했느냐, 또 내부자거래 차원에서 임원의 주식소유 상황 보고를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다른 위반 여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양형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 이외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크기, 주당 조종액, 비율, 시가총액에 미치는 조종액 비율, 크기와 시장에 미치는 기간, 행위 태양, 예컨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주문, 허위사실 유포, 차명거래 등이 수반되는지, 집단적·조직적 시세조종행위인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양형기준이 징역형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징역형 이외에 이득액의 3배까지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병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많은 경우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가 되고 있고, 벌금액의 규모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50억 원의 벌금이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액의 벌금이 부과가 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예방적 효과도 징역형 못지않은데, 공정성 침해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투명성 침해범죄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명성 침해범죄는 1유형이 2유형보다 좀 가볍게 처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형 자체가 1유형은 징역 3년, 2유형은 징역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유형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5% 보고', 즉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제도'를 위반한 경우인데 이 제도는 미국에서 Williams Act라고 해서 1968년에 처음 도입된 것이고, 그게 우리나라에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은밀한 주식 사모으기에 의해서 전격적인 적대적 M&A를 금지하기 위해서 공정한 규정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5% 이상 취득을 하면 시장에 그 취득내용을 공시해서 투자자와 회사에 일정한 Signal을 주도록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하위의 5% 보고를 안 한 경우가 1유형에 해당되고, 5% 보고를 하기는 했는데 거기에 허위기재가 있으면 2유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2유형에 해당된다는 소리는 적어도 5%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시장에 알리는 것이죠. 그런데 1유형의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게 발생하였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양형위원회가 문제가 아니고 법정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최고로 가도 1년 6월로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하면 1유형 상한의 3

년보다 낮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형위원회 쪽에서 기준을 설정할 때는 1유형, 2유형을 나눌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자본시장 투명성 침해범죄 안에 해당되는 다른 경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5% 위반, 5% 보고 아예 안 했던가, 아니면 허위로 했든가의 구분을 들어서, 그 다음에 증권신고서 내지는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상 중요사항 허위기재 또는 기재누락이 있고, 그 다음에 회계의 분식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3개가 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행위유형별로 나누어서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설정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경우에 예컨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또는 증권신고서상에 허위기재가 있다고 하면 증권신고서 사용 없이 또는 허위기재한 증권신고서를 사용해서 모집 매출된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양형인자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 위반의 경우에도 이게 과연 경영권의 향배와 관련이 있는 것이냐, 위반했다고 하는 게 지분을 자체에 대한 허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사항 예컨대 보유목적이나 자금원이나 관련 주요 계약부분에 허위기재가 있는지에 따라서 양형인자를 달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허위분식의 경우에도 대상 회사가 상장회사냐, 비상장회사냐, 널리 투자자에게 참고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자체로 위반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외에 은행으로부터 일종의 사기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만든 것인지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이 오히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 별도의 양형인자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해서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원칙적 양형기준으로 하는 점에 대한 문제점의 제기와 함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부정거래에 대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 또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양형기준 신설 등 여러 가지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의견을 주신 고창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동박수)

●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신문의 김세형 주필입니다.

저는 양형이나 법 공부가 전공은 아니고 다만, 금융시장을 다루는 곳에 들어왔다는 점에서 어떤 전문성보다는 매스컴에서 다루는 현실 감각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지금까지 증권범죄에 대해 사법부에서 비교적 심각함을 덜 느껴왔다, 그래서 애써 증권감독원에서 고발해서 범죄인을 잡아다줘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많은 피해자의 아픔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왔지 않았는가,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증시규모가 우리나라 GDP 규모를 약간 넘어서거나 비슷한 정도의 규모로 커져 왔고, 선진국들의 동향으로 봐서 앞으로는 시장규모가 우리나라 GDP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것 같고, 갈수록 전문화되는 시대에 훨씬 더 교묘한 사기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에는 아마 작년만 해도 가령 재벌 3, 4세가 수백억의 많은 차익을 남기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었고, 굉장히 높은 사람의 경우 1,200회 가량의 시세조종행위를 하고도 약간의 벌금만 물고 풀려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보통 일반범죄는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거기만 피해를 입히지만 증권범죄는 그 안에 수많은 투자자가 개입되어 있고, 특히 정보의 약자, 자금력의 약자가 매우 큰 손해를 입는 증권사기가 코스닥시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코스닥시장의 95%가량이 일반투자자입니다. 피해규모가 크다고 양형을 강하게 하는 것이 능사인가 하는 반론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에 한번은 계기가 있어야 하므로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설사 이게 꼭 양형이 강해서만 좋은 것이냐 하는 반성이 있으면 다시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이 기회에 한번 해 보자 라는 말씀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증권범죄의 유형을 공정성 침해와 투명성 침해, 두 개로 나누어서 양형을 정했는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를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신만 아는 정보를 악용하는 내부자거래, 두 번째는 시세조종 같은 사기적 부정행위, 세 번째는 공시위반이나 허위회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좋겠다. 내부자거래와 시세조종을 합쳐놓은 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고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일률적으로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얼마를 선고하는, 이 건에 대해서도 시장이 호황일 때는 조금만 해도 금방 많은 이익을 벌 수 있고, 시장이 불황일 때는 훨씬 더 죄질이 나쁜 요소가 수반되어도 훨씬 더 수익을 작게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의 지수와 연동하는 어떤 방식을 넣더라도 이것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시로 과거 같으면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지금은 3년~6년, 이렇게 강화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피해금액에 있어서 1억 원부터 300억 원까지 5단계로 예시를 하고 있고, 가중할 경우에 13년 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기사건, 버나드 메이도프가 일으킨 사기사건을 보면 650억 불,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는 규모가 되었고, 실제로 사기를 친 금액은 180억 불,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큰 돈이 되었기 때문에 300억 원에서 갑자기 Stop을 한 게 조금은 타당성이 어떤지, 한 번 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내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도 주변에서 보면 작전투자를 잘해서 2,000억 원을 번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맞은 구간 설정인지 한번 봐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CNK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K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이고, 이 사건은 지금 대주주가 카메룬의 다이아몬드 광산으로 도망을 가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 이 사건은 대주주가 총기획을 하지 않았는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혐의가 있고,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리고 에너지대사 내지는 전직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게 앞으로 공판이 되고 판결이 되었을 때 이 양형이 적용되어서 대단한 관심을 몰 것이고,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하는 시금석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주는 890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되어 있고, 에너지대사는 실제로 주변에 알아보면 본인은 투자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담하지 않았지만 구두 약속으로 10년 혹은 5년 후에 무엇을 받기로 하였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범죄자를 도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오늘 배포한 자료 중에 가중요소를 보면 ‘대상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 경우’가 있는데 CNK 사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리라 보고,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의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으로 보면 가중요소가 대단히 엉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아까 피해금액이 5억 이상이고 매우 불량한 사안일 경우에는 실형 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집행유예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많은 사기가 코스닥 중심으로 일어나고 상당 부분 사주 중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중요소에 일반 임원과 다르게 주도적인 사람이 사

주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중 처벌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안은 조금 다르지만 저축은행사건에서도 많은 공무원 내지는 감독원 사람들이 관련되었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공직자 사이의 얘기를 들으면 에너지 대사랄지 전직 공무원 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무것도 몰랐다고 하는 게 그동안의 규정이나 법이 그만큼 영성했다, 그래서 공무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들이 있다, 그래서 가중요소에 공직자들이 관련되었을 때는 훨씬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그리고 그런 것은 경감요소에도 해당되지 않도록 했더라면 이번의 CNK 사건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았으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성 범죄 오른쪽 부분을 보면 허위 재무제표와 공시가 기본 8월~1년4월로 되어 있는데, 미국의 지금까지 증권범죄를 봤을 때 작년에 있었던 라즈 라자라트남의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 11년형 정도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투자금액도 컸고, 시세조종 내지 내부자거래 사건은 한 11년 정도 받았지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002년에 엔론 사건이 벌어졌을 때 엔론 사건의 회계 담당 Skilling의 경우는 24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회계장부 조작은, 다시 말해서 가짜를 진짜로 해 놓은 것으로 보고 착각해서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시세조종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Skilling 외에도 10~15년을 언도받은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미국 사례를 다시 한 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허위재무제표는 앞에 시세조종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악랄한 사기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의 일반참작사유 중에서 주요참작사유는 아까 ‘동종 전과’ 등이 있는데, 저는 대상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건으로 사기를 당했느냐, 얼마나 많은 피해금액이 발생했느냐가 주가 되어야 되지, 해당기업이 손해를 입었다, 사주 자신이 자기 회사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데 그 기업을 봐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피해를 입혔는가 하는 것이 더 주요참작사유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경우’가 일반참작사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요참작사유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 요소에서 피고인이 고령인 경우에 일반참작사유로 긍정적 요소니까 빼달라고 되어 있는데, 영양상태가 좋고 운동을 많이 해서 머리만 잘 돌아가면 80세가 되어도 훨씬 지능적인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엔론의 Skilling은 68세이었지만 25년형, 경감되지 않은 25년형을 받았습니다. 93세까지 살라고.

그리고 이번에 메이도프도, 제 기억으로는 76세가 되었는데 150년형을 받았지요. 그

래서 ‘피고인이 고령’, 이런 것은 굉장히 old style 이다. 이런 것은 그냥 빼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은 사기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상한가제도 악용’에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진웅섭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상한가제도를 코스닥의 작전 종목에 한해서는 시급히 해제하거나 폐기하면 그날로써 작전이 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증권범죄가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허위 회계장부나 허위공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야 되는데, 현재 검찰이나 사법부에서는 ‘시세조종’ 하나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놀이마당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군데만 조사하고 큰 도둑이 두 군데에서 활개를 치고 있어도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부검찰도 ‘기업범죄 분석실’ 같은 것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10여 년 전에 나왔던 ‘용감한 검사들’ 이런 것을 보면 검사 한 사람이 10년 내지 15년을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끝까지 잡아내는 내부자거래, 이런 것을 많이 봤었는데, 내부자거래 부분과 허위공시 부분은 안 보고 있어서 굉장히 절름발이 중에 절름발이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사법부 영역은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도망가버렸습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증권범죄에 관해서, 특히 미국과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분석해 주시고,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허위공시, 세 분야로 나누어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이득액을 300억 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 그 다음에 가중요소를 보완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처벌해야 된다는 취지의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김세형 주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불공정범죄 행위들이 규모의 면에서도 기업화·조직화 되어 있고, 무자본 M&A, 정치인 등 시장테마를 이용한 부정거래,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증식과정에서 불공정거래의 발생 등 그 방법이나 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간 증권범죄에 대해서는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금번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한 형량기준이나 양형인자 등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쪽 시각에서 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형량기준과 관련해서 일반 사기범죄와 같은 수준의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는 조직적 사기범죄, 즉, 수인이 역할을 분담해서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서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즉,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대부분 다수가 공모해서 대량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점차 조직화·대형화되어가고 있고, 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 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은 일반 사기범죄보다 조직적 사기범죄와 유사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입니다. 사기범죄는 특정인을 상대로 기망을 하는 행위이지만 불공정거래는 증권시장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기망하여 피해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또 사기범죄의 처벌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이거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처벌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시장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증권범죄의 특성상 금융당국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는 비율이 높지 않아서 동 범죄에 대한 엄중처벌을 통해 사전에 동 범죄를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차원에서 양형기준안 설명 자료를 보면 조직적 사기범죄로 처벌할 경우의 문제점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부에 관한 입법자의 의사와 불일치, 종전의 선고형량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여 종래의 양형실무를 포섭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양형기준안의 제시는 과거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한 처벌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서 미약하다는 비판적 인식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종래의 양형실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기보다는 앞으로 양형기준을 통해서 설정하려는 형량이 책임주의원칙에 부합하는지, 범죄예방목적 달성에 적합한지를 중요하게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공정성 침해범죄 양형기준을 조직적 사기 범죄와 함께 하는 것이 반드시 입법자의 의사와 반한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양형인자와 관련해서, 양형기준의 주요내용으로 감경요소와 가중요소가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특별양형인자 선정 시 가중요소로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경우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또는 부정거래의 경우에도 행위자의 비난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가중요소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매일경제신문 김 주필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당해 상장법인의 대표이사, 최대 주주, 임원, 금융투자업자 등이 불공정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또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공정거래의 규모가 큰 경우, 예를 들면 호가 관여율이나 주가변동폭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도 가중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한 증권·파생상품 시장을 연계하여 시세조종을 한 경우 등도 특히 양형인자 선정 시 가중요소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집행유예 참작사유와 관련해서 양형기준안은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는 기본적으로 특히 ④, ③에 해당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실행권고를 하고 있는데, 시세조종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준 ④에는 ②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④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양형기준안 ②번은 ‘주요부정사유만 2개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공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만 실행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④번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실행을 권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 기본적으로 bottleneck이 있는 것이어서 사실상 실행이 권고되는 비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시세조종을 불공정거래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또 실행권고사유에 대한 의견으로써는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의 경우 부당이득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나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정보 생성에 직접 관여한 자로서 부당이득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실행권고사유로 바로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예방과 관련해서 일반참작사유에 사회적 유대관계나 알코올중독 및 약물중독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간접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되지만 어떤 면에서 저희로서는 불공정거래와 상관관계가 높은 법규위반행위로 규제기구로부터 사전에

조치 받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김 주필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가격제한 폭은, 양형기준과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저희로서도 이 부분 많은 고민이 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만 저희로서는 가격제한 폭을 확대하거나 폐지할 때는 투자자보호나 투기적 거래 수요확대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투자자보호를 위한 변동성 완화 장치라는 대안도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저도 이 부분은 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형사적인 제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의 제재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는 일반 사기범죄라기보다는 조직적 사기범죄에 준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는 의견과 함께 미공개 정보이용과 시세조종을 달리 구분할 이 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미공개 정보이용의 경우에도 부당이득금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형권고사유로 추가해 달라는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분의 지정토론을 일단 들었는데 우선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 지정토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5분 범위 내에서 간략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니 토론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여러 쟁점, 그리고 제기된 문제들은 저희 전문위원단에서 기준 초안 작성과정에서 검토가 되었던 사항도 있지만 검토가 되지 않았던 사항도 있습니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게재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신다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양형기준안 초안 작성에 실무적으로 직접 관여하신 정준화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준화 전문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정준화 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고등법원의 정준화 판사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공청회의 필요성, 존재에 대해서 참으로 중요하구나 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많은 지적 중에서 서너 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유형분류와 관련해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에 대하여 이득액 또는 회피 손실액을 원칙적인 양형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형기준에 있어서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어떤 범죄에 있어서 형량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추출해서 그것을 가지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권범죄에 있어서도 범행수법이라든가 행위태양, 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중요한 양형인자이고, 이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기본적으로 이익액을 기준으로 해서 구성요건을 구분하고 법정형을 차별하고 있는 점, 실제 선고형 결정에서도 주로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익액 또는 회피 손실액 이외의 다른 것을 유형분류 기준으로 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되, 다만 범행수법 등 중요한 양형인자를 특별가중 또는 감경인자로 반영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형량범위 폭을 인정하든가, 아니면 중첩구간을 확보하는 등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문제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세조종행위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집행유예기준에 있어서도 특별하게 취급해서 실행권고사유로 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웅섭 국장님께서 자본시장 공정성 침해범죄의 형량범위와 관련해서 일반 사기보다는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가 더 적절하지 않느냐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검토와 논의가 있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쌍방의 논리는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양형기준에 있어서 법정형이 출발점인 동시에 그 한계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시장법상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정형의 의미는 특별히 가중하거나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3년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다시 말씀드리어서 형법총칙에 따르면 제반 정상을 참작했을 때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직적 사기의 형량범위를 채택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기본영역의 하한이 4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의사와 다르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집행유예선고가 안 되는 4년형 선고를 권고하게 되어서 양형기준이 입법의 한계를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기범죄의 경우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불원’과 같은 특별감경인자의 지원을 받아서 감경영역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지만, 증권범죄의 경우에는 감경인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처벌불원’도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권범죄에 있어서 감경영역으로 이동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사기범죄에 비해서는 사실상 한 단계 영역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인자표에서 개별 행위태양에 맞는 독특한 특유의 인자들을 감경 또는 가중인자로 배열 또는 추출함으로써 해당 범죄 속성에 맞는 적절한 형량을 추구할 수 있도록 양형인자표를 재편하거나 좀 더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화 서울고등법원 판사님께서 양형기준안 제정과정에 깊이 관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혹시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 고창현 변호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양형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금융위원회 담당국장님께서도 나와 계시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김 주필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은 굉장히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법정형이 결국은 한계이고 상한일 수밖에 없

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시세조종이나 내부자거래 같은 경우는 이익액이 50억을 넘어간다고 하면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상한이 5년으로 묶여있으니까 죄질에 비해서 지금 법정형 자체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그렇다면 양형위원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올려져야 그 안에서 재량이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 허위공시 또 회계 분식 부분들에 대해서 법정형을 대폭 상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 끝 부분에 진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형사처벌도 중요하지만 점점 금융위원회, 감독원, 증권거래소 차원에서의 조사가 의미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또 미국의 경우에도 보시면 민사 제재금 같은 것들이 아주 큰 금액으로 부과가 되고 그런 것들도 범죄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이 중에서 이런 회계 분식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내부거래, 시세조종 쪽은 안 들어와 있고, 그렇다고 하면 형사처벌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또 기타 과징금이라든가, 제재금, 그러한 쪽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입법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진웅섭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회 관계자 여러분도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하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입법과정에서도 반영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마이크를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토론자나 발표자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은 구체적으로 지적해서 질문을 주시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방청객 이영현

저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피해자입니다.

제가 손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한 사법부의 처벌수위를 보니까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허위공시, 내부자정보, 시세조종, 가장납입해서, 한 사람이 도망갔다고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 밖에 선고를 안 하신 거예요.

법에서 추구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이것은 금융당국에서 밝혀준 사건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상하게 허위공시를 조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한 사람들이고, 범죄가 그전부터 있어서 실제 사주는 구속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허위공시를 아주 주도한 거죠. 지금까지 피해자 구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걸맞게 처벌을 해 주셔야 되는데, 벌금 1,000만 원밖에 안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집중 심리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끝내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러지도 않으면서 계속 재판은 지연하고, 증권범죄자만 수익을 내서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러 왔습니다.

양형기준도, 저희 국민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판사님도 공부를 많이 하셔서 사법고시를 패스하셨지만 나름대로 지금은 다 전문가들 아납니까? 그런데 국민 수준에 맞추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과 사법부를 많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살기 좋게 해 주어야지, 조금 흠친 사람은 징역형을 많이 선고하고, 큰 사기꾼은 벌금 1,000만 원, 이렇게 양형기준을 설정하신다고 해서 생각보다는 괴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고 엄한 처벌을 하도록 기준을 설정해 주셔서 저희가 사법부를 진짜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자

이영현씨의 오늘 소중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기존 법원의 양형이 낮았다. 그래서 좀 더 엄중하게, 입법부와 사법부가 머리를 맞대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소중한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방청객 정찬무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 1국에서 근무하는 정찬무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공시라든지, 회계 분식이 단순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년 이하가 맞습니다. 다만, 일반투자자 모집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의 매매를 통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분식회계를 하거나 허위공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위공시조문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정거래의 조문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창현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변호사님의 의견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해서는 시세조종보다는 가벼운 양형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의 법정형이 현재 같고, 모두 타인에 대한 기망을 요소로 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범죄 구성요건상 예를 들어주신 게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그리고 허수주문이라든지 가장매매, 통정매매 등의 죄질이 무거운 범행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두 범죄는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자가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주식매매를 하는데 가벌성이 있는 것이고, 시세조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허수주문이나 아니면 가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데 가벌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은 개별범죄 구성요건의 특성을 조금 다르게 생각하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두 범죄가 다르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양형인자에서 고려를 하는 게 적당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우선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정찬무 변호사님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점에 대해서 고변호사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고창현 변호사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정거래라고 하는 게 결국은 미국에서 보면 SEC Rule 10b-5거든요. 일반적 사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형이 포괄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게 과연 죄형법정주의에 맞느냐는 식의 비판도 있는 게 사실 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증권거래에 이용하게 되면 물론 일반 사기범죄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허위 재무제표 작성 그 자체에 대한 법정형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세조종의 경우에 좀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 두 가

지가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위태양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은 실제로 피해금액이나 기타 행위태양에 따라서 달라져야 될 것은 맞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경중보다도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너무 다른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인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일단 2개를 나누어서 별도의 기준을 만들고, 양형인자도 행위태양 등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가중·감경사유를 별도로 따로 정하는 게 맞다, 내부자거래의 경우에는 예컨대 신분이 내부자냐, 준내부자냐, 또는 외부인이냐, 시세조종 같은 경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위가 개입됐느냐, 또 실제로 시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이 2개가 다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양형인자 가중·감경사유를 별도로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구체적인 타당성을 위해서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별개의 기준, 별개의 양형인자로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습니다.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했던 시간이 3시 반까지인데 약 3분 정도 경과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청석에 많은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발언을 하셔야 될 분 또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저희가 지정을 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훌륭한 의견과 심도 있는 토론을 해 주신 지정토론자 세 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 반영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범죄자의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시세조종행위라든지, 자본시장을 저해하는 범죄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하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 분의 토론자와 발표자분께 박수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하셨다가, 오후 4시부터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운영지원단장

이상으로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15시 35분 휴회)

(16시 00분 속회)

● 운영지원단장

계속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와 같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하는 공간상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자 및 토론자를 단상으로 모시기 전에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안 발표는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최동렬 부장판사님께서 해 주겠습니다. 최동렬 부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형분류, 둘째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 셋째 집행유예 기준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교통사고 범죄 중에서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인 교통사고 범죄는 교통사고 후 도주 여부에 따라서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도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의 두 가지 대유형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 유형이든,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이든 간에 치사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치상죄보다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 유기도주의 경우에는 단순도주에 비하여 윤리적·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큼니다. 따라서 단순도주보다 엄중한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치사 후 유기도주는 치사 후

도주와 법정형 하한은 같지만 사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고 죄질이 중한 점을 고려하여 규범적 관점에서 치사 후 유기도주는 보다 중한 형량을 설정하였습니다.

행위의 위법성이 중한 예컨대 음주운전 등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및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을 특별가증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로써 교통사고 범죄에 전형적으로 경합되는 범죄를 양형기준에 포섭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적절한 양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일반 교통사고의 형량범위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교통사고는 발생한 결과에 따라 치상과 치사로 유형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법정형만으로 본다면 치상죄와 치사죄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법정형은 같습니다. 그러나 과실범이라 하더라도 치사죄의 결과반가치가 훨씬 높은 점을 고려하여 치상죄보다 중한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일반 교통사고범죄의 양형인자표입니다.

보시면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을 특별가증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불응 또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또는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2개 이상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의 무단 횡단 보행, 또는 피해자 측 신호위반과 같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 교통사고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의 형량범위 및 양형인자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가 교통사고 후 도주죄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표입니다.

먼저, 결과가 치상인지, 치사인지에 따라서 유형이 나뉘고, 각각의 경우에 행위태양이 단순도주인지, 유기도주인지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개의 유형으로 세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유형인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죄는 3유형인 치사 후 단순도주와 법정형 하한이 5년으로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차이가 있고, 유기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발견이나 구호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게 되며, 비난가능성도 많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서 치사 후 단순도주와는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중한 형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도주죄의 양형인자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할 때 특기할 사항이라면 ‘도주로 인해서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그대로 도주하여 생명에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유예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형분류에서 중한 유형으로 분류된 사유와 양형인자표상 특별가중인자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양형기준안의 적용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사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주간에 일어났고, 승합차 운전자입니다. 이면도로의 경우이고 피해자는 84세의 고령자로서 지팡이를 짚고 보행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승합차로 후진하던 중에 역과를 한 사안입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고 피해자를 내버려두지 않고 차량에 태워 인근을 돌아다니다가 인적이 없는 도로에 유기하고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사망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종전에 선고된 형량이 징역 2년 6월이었습니다. 양형기준안을 적용할 경우에 형량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교통사고 후 도주 유형 중 4유형 치사 후 유기도주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이라는 특별감경인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3년 - 5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기도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종전보다 높은 형량의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동박수)

● 운영지원단장

이상으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한 발표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및 교통범죄 토론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발표자 및 지정토론 답변자의 소개는 이미 1부에서 마친 관계로 생략하고, 교통범죄 지정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도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도 교수님은 경찰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신 다음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을 역임하신 다음 현재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겸 한국경찰법학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박용철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용철 교수님은 서강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이용재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재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어배나 샴페인 대학원에서 교통공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중앙대학교 건설대학원 원장, 제13대 대한교통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 및 대한교통학회 명예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다음은 장성관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성관 변호사님은 충북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하신 다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분야 연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일동박수)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토론자를 위하여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이상으로 토론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사회자이신 임성근 상임위원님께 마이크를 넘겨

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 판사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심도 있는 발표문과 토론문을 준비해 주신 발표자와 네 분의 토론자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범죄는 우리나라 범죄 중에 이른바 3대 범죄에 들어갈 정도로 발생빈도가 높고 또 국민의 실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범죄입니다.

이에 관해서 전문가 네 분의 토론과 방청객의 기탄없는 토론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간략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토론자 네 분은 교통범죄에 관한 전문가들로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관한 귀중한 말씀을 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신 최동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께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의 특징과 주요내용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각 토론자께서는 10분 범위 내외로 준비하신 지정토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의 지정토론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발표자 또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의 답변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정토론과 답변이 끝나게 되면 마이크를 방청객으로 돌려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표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하여 먼저 문성도 경찰대 교수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동박수)

● 문성도 교수

253면 이하에 있는 자료집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형이란 법관이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경우에 그 범죄에 규정된 법정형에 법률상 가중·감경 및 작량감경을 하여 얻어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할 형의 종류와 분량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재판의 최종과정에 해당하는 양형절차는 형사재판의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부실하게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에서 불합리한 양형 편차가 적지 않았고, 법원의 양형은 국민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으며 양형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어렵다 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법원도 이러한 양형절차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특히 2007. 1. 26.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양형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랜 논의와 작업 끝에 양형기준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제1기 양형위원회는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횡령·배임, 위증, 무고 등 8개 범죄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권고형량을 유형별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 4. 27. 출범한 제2기 양형위원회는 약취·유인, 사기, 절도, 사문서, 공문서, 공무집행방해, 식품·보건범죄, 마약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양형 실무에서 어느 정도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기재하도록 법원조직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부분에서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사실상 효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앞으로 양형개혁을 위한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기 양형위원회가 준비 중인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대해서 토론을 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양형기준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은 교통범죄를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로 구분하였습니다.

‘일반 교통사고’ 범죄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범죄를 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형기준안은 일반 교통사고범죄 1유형으로 교통사고 치상죄, 2유형으로 교통사고 치사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의 정의에서 일반 교통사고범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를 ‘위험운전치사상죄’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교통법상의 법정형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현격히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것을 같이 놓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시면 교통법상 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위험운전치상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서 법정 최고형이 3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고형만을 기준으로 보면 5년과 30년이라고 하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같이 놓고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일반 교통사고 1유형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양형기준안은 '경미한 상해'를 '치료가기간이 2주 이하로서 상해 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형기준안에 의하게 되면 1유형 교통사고 치상죄에 해당되고, 감경요소로 고려하게 되면 6월 이하로 됩니다. 그래서 1월 이상 6월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의 일반교통사고범죄의 법정형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정형과 같습니다. 교통법을 보게 되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 제268조 업무상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그 행위를 특가법상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정형은 형법 제268조와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 교통법상의 위반행위와 형법상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적 성질을 거의 유사하게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보통과실, 그러니까 단순과실치상죄 또는 단순과실치사죄의 가중적인 구성요건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는 치사죄와 치상죄의 법정형을 달리 구분하고 있지 않지만 보통과실, 단순과실에 의한 치상죄와 치사죄의 형량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해 보통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사망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범인데 상해의 결과냐, 사망의 결과냐에 따라서 달리 취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해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양형기준도 기본적으로 1유형과 2유형을 나누어서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금고로

되어 있는데, 상해의 결과에서는 징역이나 금고형은 없고 벌금형만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것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1유형의 교통사고치상범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합치하는지, 합치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경미한 상해, 2주 이하의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안은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법원행정처에서 1997년도에 ‘교통범죄와 양형’ 이라고 하는 연구결과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프랑스 법무성 산하 통계연구자료과에서 발간한 법무성 연감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사건사고 양형실태 통계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일반교통사고와 음주교통사고를 구분하고 있고, 일반교통사고 상해사건의 범위를 요치, 우리로 치면 전치 3개월 초과 상해사건으로만 실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이하의 상해 결과는 아예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마 벌금형이나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사건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거의 유사합니다. ‘55 대 45’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를 봤더니 집행유예까지 포함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의 비율은 3.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특히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징역형을 선고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네, 감사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중 일반교통사고 범죄유형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포함하는 것은 양자 사이에 법정형이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와 함께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치사죄는 구분해서 달리 취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의견을 내주신 문성도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다음으로, 박용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동박수)

● 박용철 교수

서강대학교 박용철입니다.

먼저,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형기준에 대해서 일단 토론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을 것입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틀을 갖춘 지금 이 시점에서 토론할 수 있는 것은 형량이 과연 적절한지, 인자 설정이 과연 적절한지, 아마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토론의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르게 누구나 가해자 내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형기준안에서 나왔듯이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 범규위반일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같이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지 말고, 되도록 비범죄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범죄유형의 범주를 가능한 한 넓게 선정해서 형을 과하도록 규정된 교통규칙 위반의 경우뿐만 아니라 그 규칙 이외에 교통관계 행정단속법규를 위반한 경우 중에 그에 대하여 형을 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포괄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이 기준안과 마찬가지로 대상범죄를 축소해서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도주’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양형기준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상당히 일치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사 후 유기도주’에 관해서는 아까 발표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더 질문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기준안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통계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크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비판이 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양형기준안의 설정에서 그것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그런 양형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통범죄 역시 그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통계와 양형기준안에서 가중 시 어떤 형이 선고될지에 관한 것은 표 1과 2에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는 양형기준안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형을 가중해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양형기준안을 적용했을 때 대상범죄로 규정된 교통범죄의 경우에는 선고형 자체가 기존보다 상당히 무거워지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상범죄에서 제외된 경우에 제외된 교통범죄와의 형량 불균형이 점차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일단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자에 관한 것입니다.

인자에 있어서는 특별·일반양형인자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심신미약 관련된 것을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일반 교통사고, 그리고 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모두 공통으로 소위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의 경우’를 특별양형인자 중의 하나로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범죄의 경우에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의 예에 어떤 경우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예를 들기는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이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의 예로 포함될 수 있는 것인지, 양형기준을 만드실 때 어떤 것을 상정하신 것인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일반 교통사고에서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중에 감경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승자 역시 일반 교통사고 발생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즉, 가해자인 운전자의 과실행위가 동승자인 피해자로 인해서 발생되었거나 혹은 과실행위에 책임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감경요소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히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할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과실로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에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일반가중인자 중에 감경요소

로 보고 있는 정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이유에 관해서입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데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이유가 다 공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것이 양형 불균형과 현재 선고된 형량 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교통범죄의 경우 양형 불균형이 우선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선고되는 형량 자체가 너무 가볍다는 인식 때문에 형량을 가중시킨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통범죄라는 것이 일반인도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는 범죄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양형기준안에도 나와 있듯이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 비범죄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르게 한 교통범죄를 처벌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은 일반인이 피부로 접할 수 있는 법집행을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양형기준을 정립시킨다는 것이 현재와 비교해서 무조건 무거운 형량의 선고라는 결과를 불러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양형기준이 적용함으로써 인해 이전보다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경우에 그 이유가 보다 상세하게 설시가 되어서 선고의 대상인 피고인이 형량 선고의 이유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또 적용할 때 모든 과정이 소위 온정주의적인 모습을 띠어서는 안 되지만 피해자에게 상해 내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모습을 띠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행위가 가해자의 고의행위가 아닌 과실행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양형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조금 더 현실화함으로 인해서 양형 불균형 혹은, 만약 그 기준을 만든 이유가 형량이 좀 가볍다는 인식이었다면 모든 것이 해소되어서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치사 후 유기도주의 경우에 가중영역에서 징역 5년~8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살인범죄에 비추어 보더라도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양형기준안 대상에서 제외된 교통범죄와의 형량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셨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일반 양형인자에 대한 질의와 교통범죄의 양형기준 설정 이유에 관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 일괄하여 답변을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 번 귀중한 의견을 내어주신 박용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용재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동박수)

● 이용재 교수

감사합니다.

이용재 교수입니다.

이런 자리에 처음 제가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마 대부분 참석하신 분들이 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이고, 또 법을 직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공학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주로 사람과 차량의 특성을 이용해서, 교통안전의 법규라든가 또는 차량이나 인간들의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이런 과학적 연구 또는 과학적 제품, 또 잘 안 될 때는 법규를 통해서 그러한 안정적인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쪽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다소 이쪽과는 좀 멀긴 하지만 이런 자리에 또 초대를 해 주셔서 저희 학문 분야를 말씀드릴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형기준안 설명자료를 보니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의 범주를 ‘일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도주’ 분야로 나누고 있고, 현재 이 양형기준이 일반교통사고는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교통사고 후 도주’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하는 쪽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을 만들 때, 저희는 과학자여서 제시해 주신 통계기준, 또 이런 경험적인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보니까 지금 주장하신 대로 양형기준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좁고 집중적인 경향을 갖고 있다, 경험적으로, 이러한 양형기준은 크게 형평성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혹시 우리 판사들이나 변호사들이 교통사고의 양태 변화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여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박용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교통범죄는 비범죄화되어야 된다고 아주 많이 이야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방 조치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교통범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질서행위의 교란 때문에 생기는 교통범죄가 있고, 두 번째는 행정법규위반으로 인해서 생기는 범죄, 세 번째는 교통범죄,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과실로서 생기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생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범죄화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발전되어 온 것에 대하여 공학하는 사람으로서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법규 쪽으로 보면, 최근에는 모든 경향이 과거에 개인교통수단보다 대중교통 또 스쿨버스와 같은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교통수단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대단히 피해가 큰 것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범죄화라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이런 부분에 조금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는 교통사고의 내용입니다.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일반교통사고의 변화인데 과거 교통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과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속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첨단 교통장비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TS라고 해서 첨단교통에서 CCTV 라든지 또는 과속을 탐지하는 감시기능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과속에 의해서 생기는 교통사고는 상당히 줄고 또 거의 증가하지 않는 상태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법규위반이라든지 안전거리 미확보, 신호위반 등 우리가 말하는 후진국형 위반사항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의 변화를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에 참조해야 합니다.

특히 특별양형인자라는 것을 통해서 교통범죄를 다루는 도구가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점에 대해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양태가 바뀐 것 중 또 하나는 고령자 증가로 인해서 노인 교통범죄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조금 이따가 같이 통계를 보시면서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볼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여성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

주느냐 하면 노인과 여성에 의한 노동시장의 개입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금까지의 법 테두리에서 다루게 되면 대단한 무리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과 여성의 부분은 특별양형인자 쪽에서 감정해 줄 수 있는 요소로 반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반면에 기중요소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통범죄는 동종누범이 많은데 같은 것을 일으킬 때 굉장히 엄해져야 된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강화를 더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에 대한 교통사고와 많은 사람을 몰고 가는 상업적 행위들을 하는 또는 대중교통을 가지고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한 양형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교통 사망사고가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실은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부상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30 개국 중에서 최악의 교통 통계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의 의미는 양형기준의 완화를 시간상으로 잘 조정해 주셔야 된다. 너무 급격한 완화조치는 조금 조심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아직까지 국민의 생활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로서 교통사고가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의 완화는 어쩌면 국민을 대단히 불안케 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통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자의 272페이지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교통안전의 현황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OECD 자료인데 한번 보면 너무 많은 양이기 때문에 12개 나라만, 적어도 선진국 대열에 있는 12개 나라를 사상자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망자 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만, 그 사망자 수만 가지고 보더라도, 272페이지에 보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12개국, 사실은 29개국 다 했어도 제일 꼴찌입니다.

숫자를 보면 '대한민국' 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나와 있는데 2004년 한해에 10만 명당 13.6명이 죽었어요. 그게 지금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나머지 12개국 선진국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이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좋아지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관심도 많아진 것은 틀림없으나 아직까지도 통계자료에서는 그러한 점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273페이지를 보시면 '사고유형별 교통사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차 대 차 사고로 인한 사고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게 거의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차와

사람의 사고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차량 단독에 대한 것이 많아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신호등에 대한 경시 태도가 팽배해 있다고 저희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사고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에 그 유형별 내용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원인이 되었던 과속, 한번 보시면 발생건수가 한 해에 400건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호위반, 안전 거리확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등과 같이 후진국형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든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제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에 음주운전이 세분화되어서 발표되었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또 완화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으로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법률이 논의된다는 게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교통사고 또는 교통범죄를 일으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8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이 많이 다치고 많이 죽느냐 하는 얘기인데 가해자인 운전자의 처지에서 보면 20세, 21세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65세를 보면 계속 증가하는, 고령자인 가해자도 많아지고 사상자도 많이 생기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혹시 고령자의 문제를 간과하든지 조금 경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281페이지 교통사고 사상자수도 신중히 보셔야 됩니다. 65세 이후 사망자와 부상자수에서 부상자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철학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82페이지에서는 여성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통계적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성운전자를 보면 교통사고에서 사망건수는 전반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줄여주게 되기 때문에 부상자와 그 건수는 잘 살피셔야 됩니다. 발생건수가 2005년에 3만 정도였던 것이 거의 4만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부상자 수도 5만에서 거의 6만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노인과 여성 쪽은 감경할 수 있는 어떤 요소로서 고려를 해 주셔서 조금

더 세분화된 인자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여기서 마련된 양형기준이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는 좋은 것이 되고, 또 교통범죄를 줄일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감사합니다.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통계를 언급하시면서 상세한 발표를 해 주신 이용재 교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구체적인 통계를 기초로 노인이나 여성교통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을 정하는데 참작해야 된다는 말씀과 음주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 설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관 변호사님의 지정토론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일동박수)

● 장성관 변호사

저는 제가 처리한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서 과연 이 양형기준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사건인데, 사건개요는, 피고인은 2011. 6. 1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도중 술에 취해서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했으나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를 가하고, 또 피해자 소유 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143만 원 상당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죄명을 보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이 적용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은 도로교통법위반이 됩니다.

피고인의 나이는 54세이고, 직업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1994년도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된 이후로 1996년도에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최근 2001년

~2008년 사이에 음주운전측정거부가 두 번 있었고, 무면허운전이 한 번, 음주운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른바 당해 교통범죄의 전과가 10회 정도 되는데, 이 사건의 선고 결과는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양형기준안의 형량기준을 보면 기본유형은 4월~10월, 가중유형은 8월~1년6월입니다.

이 사안에 비추어서 형량을 내 보면 피고인의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호 신호위반, 제7호 무면허 운전, 8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당해 교통범죄 동종전과가 10회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가 못 된 점에 비추어서 양형기준안의 가중유형에 해당합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은 기본유형의 상한 또는 가중유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량이고,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징역 1년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의 형량기준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인데, 사건의 개요는, 피고인은 2011. 5. 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도주를 하였으며, 도주하는 과정에서 역주행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죄명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흔히 말하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물건손괴 후 미조치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이 됩니다.

피고인의 나이는 46세이고, 직업은 없습니다.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보면 1993년 도로교통법위반을 시작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이 선고된 이후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당해 교통범죄의 동종전과가 14회 정도 됩니다.

이 사건의 선고결과는 검사는 2년을 구형했고, 1심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제가 이 피고인을 변호할 때 검사가 항소 안 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을 했습니다.

양형기준안의 형량기준은 기본유형은 징역 8월~1년 6월이고, 가중유형은 징역 1년~3년입니다. 이 사건을 이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결론을 맺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음주운전과

또는 특가법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에 해당하고, 치료기간이 약 5주 이상인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 동종전과가 14회에 달하는 점에 비추면, 이 사건은 이종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서 양형기준안의 가중 유형에 해당합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은 기본유형의 하한 또는 가중유형의 하한에 가까운 형량으로 피고인에게 적정한 형량은 징역 1년6월 정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사건은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사건입니다.

사건개요는, 피고인은 2011. 7. 24.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의 다리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해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적용 죄명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나이는 45세이고, 직업은 자영업입니다. 피고인의 범죄경력은 2001.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09. 10. 5.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결과는,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고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은 항소기각을 하였습니다. 양형기준안의 형량기준은 기본유형이 징역 4월에서 징역 10월, 가중유형은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 이 사건을 양형기준안과 관련해서 결론을 맺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는 가입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는 교통법 제3조 2항 단서 1호 신호위반과 8호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치료기간이 약 8주 이상인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별도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봐서 양형기준안의 가중유형에 해당합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은 기본유형의 상한 및 가중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징역 1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건은, 이것도 특가법상 도주차량인데 집행유예 사안이라 제가 하나 추가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 1. 25.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를 가하고, 피해차량에 180여만 원 상당의 손괴를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적용 죄명을 보면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도주의 점, 그러니까 특가법위반(도주차량)과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또 음주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위반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나이는 30세이고, 직업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경력은 97년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 20만 원이 있고,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이 있고,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이 있습니다. 선고결과를 보면 검사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였고, 1심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기준안의 형량기준을 보면 기본유형은 징역 8월에서 1년6월, 가중유형은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입니다.

이 사안은 피고인의 범죄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제3조 2항 단서 8호 음주운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나, 치료기간이 약 3주로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안의 기본유형에 해당하며 집행유예의 권고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심이 선고했던 징역 8월은 기본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정한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양형기준안의 형량기준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통범죄는 도덕적인 비난가능성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성에 비추어서 지금까지의 선고 형량이 다소 가볍지 않았나,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교통범죄 중에서 경범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이나, 이 범죄자들이 결국은 중범죄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이나 특가법상 도주차량, 위험운전 치사상의 범죄자로 발전하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형법상 중형주의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흔히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들이 대부분 중범죄로 발전되는 점을 참작했을 때, 작년 12. 9.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처벌조항에 따라 요즘에는 조금 더 강하게 선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이 아마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많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네 가지 사안을 사례로 들어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증을 해 주신 장성관 변호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도 저희가 소중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분의 지정토론을 마쳤는데, 우선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 지정토론자 여러분이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박용철 교수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먼저, 제가 답변 드려야 될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초안에 관여하신 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을 할까 합니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사실은 과실범에서의 ‘비범죄화’ 논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교통법상에 특이한 조항을 두고 있어서 일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아예 처벌을 면하는 법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 해당 과실만큼에서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일반예방적, 규범적인 효과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비범죄화를 하는 입법례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바꾸어 말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포괄적으로 비범죄화한 결과,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다발화 경향이라든지, 주의의무의 형해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계해야 할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법의 예외사유는 사실 운전에서 지켜야 될 의무의 극히 일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옆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자기도 차선변경을 시도한다, 사실 운전습관에 달린 문제이고, 운전문화에 관계된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비범죄화를 하는 반면으로서 전형적이고 중한 과실에 대한 처벌은 지금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범죄화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착수하게 된 것은 상임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상당히 빈발하는 범죄라는 것이고, 일반인이 상당히 조심하더라도 빠질 수밖에, 또는 당할 수밖에 없는 범죄유형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형량이 부당하다는 논의는 많지 않았다고 보이지만 이 형량 설정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구간에 따른, 양형인자 배열에 따른 형량의 예측가능성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범죄에서는 형량 편차가 굉장히 좁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굉장히 좁은 영역의 선고형량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과실의 경중이 전혀 형량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결과일 수도 있고, 상해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전히 집행유예가 교통범죄에서는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 피고인의 관심사도 집행유예 여부일 것이고요. 따라서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를 설정하는 것에 의해서 상당 부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범죄화 내지는 처벌 필요성과 관련해서 문성도 교수님께서 독일 사례도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법원에 구 공판된 사건은 교통범죄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대부분은 검찰에서 구약식으로 처리되는 사례가 많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전체 실정법위반에 해당되는 교통범죄의 극히 일부분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유기도주의 가중영역이 사실 참작 동기 살인과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전문위원단에서도 이 점을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치판단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어서 이것이 과연 토론으로 또는 다수결로 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저도 지극히 의문입니다.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현장에서 옮겨다가 유기한 전형적인 사례를 보시면, 사망한 다음에 시체를 옮겼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생존해 있는데 옮겨서 내버려둔 결과 숨졌는지 사실 가려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망시간의 추정이란 것도 상당한 편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온도나 사망 당시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따라서 언제 사망했는지를 상당히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사한테 입증책임이 있는 관계로 검사가 기소를 할 때는 이것을 선뜻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같이 고려해야 될 점은 현대 응급의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의료기관도 상당히 다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보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앰بول런스는 경찰차보다 먼저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유

기하지 않았다면 생명을 유지 또는 사망의 결과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황도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살인죄보다는 역시 유기도주로 기소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 보면 참작 동기 살인에 준해서 처벌하는 것을 반드시 비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점은 오늘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성관 변호사님께서 실제 처벌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양형기준보다 상당히 가벼운 형을 얻으신 것 같고, 저희의 시뮬레이션 결과로도 특별히 양형기준안이 획기적으로 지금 처벌 양형보다 높게 된다거나 또 낮게 된다거나 하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은 저희 시뮬레이션 결과와 특별히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의 점은 여성운전자와 노인운전자의 증가에 따른 양형인자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사실 이 점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농담처럼 이야기하자면 ‘저런 사람은 운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가 아니라 살인면허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점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맞물려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직접 초안을 담당하신 전문위원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더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특히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죠.

● 정준화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대부분 다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두 가지 정도만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성도 교수님께서 ‘경미한 상해를 유형에 포함할 경우에 지나치지 않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공감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통계적으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단순교통사고라면 6월 이하의 금고형 선고받

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다만, 우리 양형기준에서는 경합범인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라든가, 무면허 운전과 같은 교특법 제3조 2항 단서 부분을 인자로 추가함으로써 경합범이 되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렇게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경우라든가, 아니면 동종전과가 많은 경우, 때로는 무보험차량으로 사고를 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라면 설사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어느 정도 처벌이 필요하고, 또 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나 중상해를 포함해 놓고 그와 대칭되는 경미한 상해를 감경인자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철 교수님께서 양형인자와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동승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일반감경인자로 넣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형법 총칙 제51조 제2호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를 양형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안전운전 촉구의 주의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동승자는 대부분 운전자와 가족, 친지, 친족 같은 개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라면 동승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운전자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당할 것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 교통사고범죄에 비해서 피고인의 책임을 다소 경감시키는 일반감경인자 정도로는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위원님이 공감하셨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단순히 동승자로 갈 것이 아니라 택시나 버스 승객처럼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극단적이지만 운전자가 강요해서 타게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인 해 봅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께서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지적하셨다시피 양형기준을 만드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양형 편차를 줄일 목적도 있고, 아니면 과거 해당범죄나 양형이 적정하지 못해서, 반성적 고려로 좀 더 엄정한 양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교통사고범죄는 일률적으로 한쪽으로 말하기는 힘들 것 같고, 일반 교통사고라면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게 양형 편차가 심하지 않았지만 양형 편차의 시정이라든가, 기준의 제시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도주범죄의 경우에는 실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만, 도주범죄 중에서 유기도 주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단순도주에 비해서 상당히 죄질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가중영역에서는 상당 부분 규범적 고려를 해서 형량을 상향

조정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오늘 지정토론자분들께서 추가로 발표하시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한 번 돌려 보겠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간단한 성함과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방청객 윤영진

노원구에 사는 윤영진이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입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써온 것이 있으니까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실이 중한 사고에서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변제공탁을 하고, 불구속재판을 받는 동안에 변제공탁서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공탁금액만큼 보험회사에서 공제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선서하고 사과 없는 용서는 절대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변제공탁을 하였다면서 집행유예로 판결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양형기준이 무엇인지를 모르겠고요. 진짜 젊은 아들, 떠나간 아들을 생각하면 흥분이 돼서 말도 못하겠고 눈물만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출하겠습니다.

● 사회자

네. 우선 그런 일을 당하셔서 정말로 억울한 심정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실이 중한 사고이고, 또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 공탁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 못 하실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양형기준을 만들고 혹시나 있을 법관 사이의 양형 편차를 없애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말씀 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해 주십시오.

● 방청객 윤수남

자양동에서 온 윤수남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양형기초자료 분석결과가 나옵니다. 사망사고에 대해서 실행이 8.1%, 집행유예가 91%로 나와 있는데 상해와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재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172페이지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있어서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많습니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155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결국 사망사고에 대해서 법원에서 또는 양형위원회에서 기준이 느슨하기 때문에 사망사고, 인명의 중요성이 부족해서 OECD에서 제일 많은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점을 양형위원회에서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고, 다른 사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네,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두 분께서 특히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 유족이시고, 또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에 대해서 법관들의 양형 편차, 양형이 이렇게 차이가 없다는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양형기준을 만들면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사고 양형의 실제 선고된 형량을 보면 편차가 상당히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양형실무가 상해의 정도라든지, 과실의 경중을 충분히 형량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적 고려는 충분히 해 왔고, 또 그 결과가 오늘 발표한 양형기준안 초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된 유족의 심정을 누가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다 공감하는 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주의의무가 있는지, 위반됐는지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주의의무 위반이 게재된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사망사고와 상해사고의 형량 취급에 있어서 저희는 유형분류를 처음부터 달리해서 차등을 두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염려하신 부분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아마도 두 분의 방청인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교통사고범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준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어떤 피고인의 경우에는 충분히 실형을 선고해서 사회에서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음에도 법원에서 단순히 집행유예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단에서 금방 발언한 것처럼 충분히 양형기준을 잘 반영해서 정말 실형이 필요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정말 사회적으로 교화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만들도록,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또 다르게 발언하실 분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정토론자님들께서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부분이나 양형위원회에 ‘꼭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시고, 또 훌륭한 발표와 지정토론을 해 주시고, 특히나 방청석에서 양형위원회에 아주 소중한 의견을 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만들 때 충분히 반영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공청회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운영지원단장

이상으로 제5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0분 폐회)

방청객 의견

방청객 의견

| 증권·금융범죄 관련 |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허위공시 등의 증권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에서 최소한 징역형 이상의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주기 바람.

| 교통범죄 |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었음.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의 경우에는 유족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합보험 가입 유무, 손해배상금 공탁 등 사유를 불문하고 실형 위주로 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제정하여 주기 바람.

우리나라의 경우 교통사고로 피해자사 사망한 사안 중 91%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8.1%의 사안에 대하여서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음. 양형기준 제정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완화할 경우 인명경시 현상이 발생하여 사망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기 바람.

